



주말 비온 후 기온 '뚝'

11월의 마지막 휴일인 2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26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 늦게 첨 흐려진다"고 예보했다. 새벽에는 내륙 산간 지역과 남해 먼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 17도로 평년(2~11도)보다는 포근하겠다.

남쪽에서 기압골이 서서히 접근하면서, 휴일인 26일은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는 27일까지 이어지고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친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ju.co.kr

호프집 여주인 살해 용의자 검거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 해남경찰은 24일 호프집 여주인 김모(46)씨를 살해한 혐의로 한모(37·해남군 북일면·이발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께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김씨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깃줄로 김씨의 목을 허리에 걸어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맥주병과 솔잔 등에 남은 지문 7개를 감식해 한씨를 용의자로 지목, 이날 오전 10시 20분에 충남 조치원 앞 건널목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한씨가 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kwanju.co.kr

판돈 3만원 친척간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 처벌 못해

음식점에서 친인척 사이에 판돈 3만원의 도박을 한 것은 오락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친족들에게 속칭 '고스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한 조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돈이 3만원일 때 불과하며 도박을 한 백도씨 등 조씨의 친족이 화투놀이를 한 경위와 동기, 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친족간의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고종사촌 2명이 새벽시장 식재료 구입을 위해 들었다 잠깐 시간이 나서 한 화투놀이에 대해 법원이 즉결심판에서 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도박행위라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9일 FTA저지 2차 대회 불안감 고조

시위단체, 금남로에 트랙터·콤바인 동원

경찰, 검거 전담부대 투입 원천봉쇄 방침

22일 광주시청 앞 반 FTA시위가 극렬 폭력사태로 변질된 이후 당국이 강력한 사법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재야·농민 단체들은 오는 29일 농기계까지 동원해 또다시 도심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미 FTA 반대 광주·전남 운동본부'(이하 반FTA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9일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2차 범국민궐기대회'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혀 도심 교통체증과 폭력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FTA 광주·전남본부의 주요 참가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오는 29일 광주집회에는 트랙터·트레인·콤바인 등 모든 농기계를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집회 참가자 전원이 구속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반 FTA시위 및 집회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주최측이 금지 통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1차적으로 경찰력을 지역별 출발지에 배치해 광주 집결을 막고, 2차 적으로 검거 전담 부대를 투입한다는 '원천봉쇄' 계획을 세웠다.

또 집회 당일 불법 시위자에 대해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학생 선민성(27·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지난 22일 시위대의 광주시청 습격 때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며 "제발 폭력 시위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모(39·광주시 동구 금남로)씨도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옛 도청 앞에서 또 폭력 시위가 열리면 온 광주가 하루 종일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ju.co.kr

노점상·자영업자 피해 손배소 지원...“더 이상 기소유예 없다”

법무부 폭력시위 근절 로드맵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광주시청 앞 FTA 반대 시위'를 주도한 위력한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과 전국농민총연합 도연평 기원주 부의장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 가담자 15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등 시위 현장에서 걸친 21명을 전원 사법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FTA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광주시청 유리창을 부수는 등 4억2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은 또 광주전남 희망연대 대표 허모씨 등 시위 주최측 12명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겠다는 계획이다.

◇ "더 이상 기소유예 없다"=법무부

법무부는 불법 시위 가담자에 대해 형사·민사·행정적인 대책을 적극 활용해 불법 시위 악습을 근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노점상을 비롯한 불법 시위 피해자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불법 시위대가 시민을 불모로 법을 무시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불법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철저히 가려내 죄를 엄하게 묻고,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천명한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단순 가담자라도 더 이상 기소유예는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단순 가담자의 경우 사설상 처벌을 면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또 불법·폭력시위 가담자는 사소한 불법 행위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불법 시위 가담자에게 악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소를 통해 법정에 세우는 등 형사처벌을 한으로써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철저히 가려내 죄를 엄하게 묻고, 핵심

가담자는 구속 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침을 세웠다.

◇ 노점상·자영업자 민사 손배소 적극 지원=불법시위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형사적 차원의 대응이면 불법 시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불법시위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손해소를 내려고 해도,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 소송을 낸지 몰라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관행이었다. 법무부는 이처럼 방법을 몰라 불법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소를 내지 못했던 개인과 단체에 법률 지원을 하면 법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집회·시위의 향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산 비아그라 등 3만여정 국내 유통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중국산 비아그라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노모(46·대구시)씨 등 9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보파리상들이 밀수한 중국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전국 성인용품점에 공급하는 등 최근까지 약 3만 정을 국내에 유통,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 등은 1정당 1천~2천원의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1만6천~2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아무런 성분이 없는 2천500원 상당의 여성홍분제를 3만원에 파는 등 폭리를 쥐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중국에 제류하면서 정품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한다는 스웨이팅을 대량으로 발송한 박모(36)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ju.co.kr

홈페이지 음란물 게재

마광수교수 불구속 입건

서울 서대문경찰은 24일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연세대 마광수(55·국문학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 교수는 지난 해 5월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1995년 6월 16일 대법원에서 음란물로 확정 판결받은 소설 '즐거운 사라'와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 교수의 개인 홈페이지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만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마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게재한 글들은) 리얼리즘으로 리얼한 현장묘사일 뿐"이라며 "음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일본 번역서들은 별 게 다 들어와서 심의를 모두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니저 사칭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서울 마포경찰은 24일 연예인 매니저로 신분을 속여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여 성폭행까지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모(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월 8일께 연기연습을 시킨다면 연예인 지망생인 김모(19)양을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콘도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김양에게 연예인으로 성공시켜주는 대신 '요구하는 모든 성관계에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전속계약금 10만원의 100배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 '노예 계약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

사행성 게임 사실상 전면금지

상품권 등 경품제도 폐지...기념품만 허용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들의 '도박운영'으로 오용돼온 상품권을 포함해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금지해 사행성 게임 확산의 맥락에 대비해 관

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버스 규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정보통신부·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TF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에는 기술상의 제도 도입 등 게임을 등급분류제로 개선, 성인용게임장의 허가제, PC방에 사행성 게임을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ju.co.kr

경찰은 납치 현장인 광주시 남구 백운동 국제호텔 사우나 내부 등에 대해 감식을 벌였지만, 용의자들의 지문확보에는 실패했다. 용의자 인상착의도 3~4명의 머리 모양 등을 확보했을 뿐이다.

앞서 공씨는 21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국제호텔 사우나 안 탈의실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곤란들에 의해 납치당했다가 6시간만에 광주시 북구 종흥동 광주역 인근에서 풀려난 뒤 경찰에 '오인 납치'라고 주장하며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피해자 공씨를 보호하는 데는 못했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ju.co.kr

건설사 사주 납치사건 수사 난항

지문 확보 실패...차량추적도 단서 못찾아

광주 N건설 사주 공모(48)씨 납치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남부경찰은 용의자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피해자의 혐조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피해자 공씨를

만나 간단한 조사를 벌였으나, 이후 연락이